“촛불정신은 호남정신 … 기득권 청산이 국민대통합”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밝았다. 올해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조기 대선 실시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헌재의 탄핵 인용이 불가피해 오는 4~5월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국민의당을 원내 3당으로 견인했던 호남 민심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느 한편으로 쏠리기 보다는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남 출신의 강력한 대권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여야 잠룡들의 시대적 비전과 정권 창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국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호남 민심의 선택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광주일보는 신년을 맞아 여야의 대선 잠룡 11인에게 4개 항의 서면질의를 통해 촛불 민심으로 나타난 시대정신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로드맵, 호남의 미래,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광주일보가 서면질의를 실시한 11인의 대선 잠룡들은 지지율을 중심으로 정당과 권역별 대표성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지지율에서 사실상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데다 언론과의 공식인터뷰도 사절하고 있어 서면질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은 서면질의 공통 내용.

❶촛불 민심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❷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있다면.

❸소외받지 않는 호남의 미래와 국민대통합을 위한 제언은.

❹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은.

/임동욱기자 tuim@
/박지경기자 jkpark@

※캐리커처 고근호

문재인 전 대표

이·박 집권 민주주의 후퇴 공정·책임·협력 우선돼야 균형발전 정책 강력 추진

❶ 민주주의 정신의 부활이다.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집권 기간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정의와 민생은 실종됐다. 결국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다. 촛불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일깨웠다. 결국 촛불 민심이 민주주의 정신이자 시대정신이다.

❷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핵심은 정의다.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 재건, 사회적으로 공정사회, 경제적으로는 국민성장으로 집약된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공정, 책임,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 사회 전반의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아 공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재난이 있을 때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 국가로서의 공공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 지역과 세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❸ 호남의 소외는 박정희 정권의 지역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부터 시작됐다. 역대 새누리당 정권은 그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수도권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가 국민 통합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차별과 소외를 없애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만이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❹ 지난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했듯이 개헌은 필요하다.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은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오래된 적폐에 대한 대청소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초반에 추진하면 된다.

안철수 전 대표

대기업 위주 경제 미래없어 호남 민심은 공정사회 요구 대통령 결선투표제 시행해야

❶ 공정과 책임이다.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뿌리까지 썩은 부패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라는 것이 촛불 민심의 명령이다.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 퇴진, 정권 교체, 구체제 청산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권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❷ 대한민국 전 분야의 총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과 재벌 개혁,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 안보와 외교 분야 공백도 메워야 한다. 특히,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과 같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 실력과 노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의 틀을 강고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❸ 권력과 기회, 부의 기득권 독점 구조를 새정치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 기존의 양당 정치는 지역 불균형의 폐해를 낳았고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을 통해 깨뜨렸다. 호남 민심이 요구하는 공정 사회를 정권 교체로 실현시키겠다. 기득권 체제 극복이 국민대통합의 유일한 길이다.

❹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방안이다. 이에 앞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망국적 양당제를 퇴출시키고 다당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해야 한다.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는 정치권의 연대를 넘어 국민의 연대도 실현시킬 수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 재벌·정치개혁 요구 다음 리더십은 ‘장수형’ 4년 중임 대통령제 논의

❶ 우선 구체제 기득권 청산이다. 국민은 단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꼭두각시 대통령을 세우고 정치기득권을 누려온 새누리당의 심판과 정치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던 재벌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정치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정치가 국민을 끌고 갔다면 지금은 국민이 정치를 이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인은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서포터·서번트다.

❷ 대한민국 문제점인 불평등·불공정을 깨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따라서 다음 리더십은 관리형이 아닌 장수형이어야 한다. 기득권 저항에 맞서 용기와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 공정사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❸ 박정희와 부패 기득권 세력이 지역을 분할하고 차별을 통한 지배전략을 쓰면서 호남은 소외당했다. 이 문제부터 되돌려야 한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중앙에 집중된 산업·예산·교육 등의 기회와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게 해야 한다. 또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❹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헌은 필요하다. 따라서 대선 공약으로 후보들이 입장을 천명한 후 차기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한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선 전 개헌은 시기·주체·계기의 측면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차기 정부 개헌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 조정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희정 충남지사

촛불은 국민주권시대 상징 정치·제도 개혁 나서야 정계개편 명분 개헌 안돼

❶ 2016년 전국을 밝힌 촛불은 국민주권 시대를 상징한다. 낡은 정치를 탄핵하고 시대 교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권력과 돈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❷ 정치와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새 시대의 경제·안보·외교 전략과 사회안전망 재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법치의 공정을 바탕으로 갈등을 조율하는 새로운 리더십과 공존의 철학이 필요하다.

❸ 촛불 정신의 뿌리는 호남 정신이며 김대중·노무현 정신이다. 지난 1980년 금남로와 2016년 광화문에서 공정한 사회,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던 목소리는 같다. 이를 새로운 시대의 동력으로 계승해야 한다. 호남의 미래와 국민대통합은 오직 민주주의를 통해 담보될 수 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땀의 대가가 왜곡되지 않는다면 국민대통합은 자연스레 이뤄지고 국가는 융성한다.

❹ 원칙적으로 개헌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개헌 논의는 정략적이다. 정계개편의 명분으로 개헌을 이용하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감안하면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정치 집단의 권력 분점 논의로 흘러선 안 된다. 사회적 총의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 주권과 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1% 기득권 지배구조 바꿔 대대적 탕평 인사 펼쳐야 개헌은 국민적 합의 필요해

❶ 촛불 민심은 1% 기득권 세력의 지배 구조와 질서를 바꾸자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사회를 짓눌러온 99대 1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불평등 구조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멈추게 했고 소득, 교육, 취업, 건강 등의 불균형으로 확대됐다. 불평등 구조 해소야 말로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이다.

❷ 탄핵 이전이라도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 마련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법안의 즉각 처리,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 등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새로 탄생하는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혁파하는 한편, 재벌 경제체제 종식과 권력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국민 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

❸ 인사에서 지역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대대적 탕평 인사를 펼쳐야 한다. 예산과 조직 등 지방자치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협치를 기본 이념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❹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국가 시스템 혁신이 골자가 돼야 한다. 오는 2019년은 임정 수립 100주년이 된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2020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